

9개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직원 확대

대상자 7.6%에서 68.1%으로 9배 가까이 증가 전망
금융위, 최고·최저 연봉 차등 20~30% 이상 유지

금융당국이 9개 금융공공기관의 휴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특히 차하위(4급) 직급 기본연봉에도 인상을 차등폭을 적용하는 등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최고·연봉과 최저 연봉 간 차이를 20~30%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협약결제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발표했다.

최하위 직급(5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9개 금융공공기관 전직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또 4급의 기본연봉에도 인상을 차등폭을 적용한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권고안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 방식은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금융위는 2급 이상 간부직에는 지난 2010년 정부 권고안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금융공공기관 간부직의 성과보수 비중은 28%로 정부 권고안(20% 이상)을 충족한다.

하지만 3~5급 비간부직은 일부기관이

호봉제를 유지하고 연봉제를 실시하는 곳도 기존 연봉·자동인상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1827명(전체의 7.6%)뿐인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1만821명(68.1%)으로 9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전체 연봉에서 성과연봉 비중을 올해 20% 그리고 내년 말까지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성과연봉 비중 목표 30%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20%) 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공공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전체 연봉의 최고·최저 차등은 20~30% 이상으로 운영해 연봉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단 갑작스런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간부직은 30%, 비간부직은 단계적으로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준에 고정수당처럼 운영되던 부분은 변동성과급으로 전환된다. 성과평가를 할 때도 기존 집단평가에서 개인 및 집단평가를 모두 반영하게 된다.

또 직무분석을 통해 직책급이 아닌 실



올 뉴 K7 1호차의 주인공

기아자동차는 1일 올 뉴 K7 1호차의 주인공으로 수의사 겸 크로스핏 트레이너 최동혁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질적 직무급을 도입, 동일 직급 내 최소 3개의 직무급을 설치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다음달까지 외부 전문기관과 컨설팅 등을 받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간부직은 30%, 비간부직은 단계적으로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준에 고정수당처럼 운영되던 부분은 변동성과급으로 전환된다. 성과평가를 할 때도 기존 집단평가에서 개인 및 집단평가를 모두 반영하게 된다.

장기성과를 반영하는 성과평가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인재육성, 고객만족도 등 질적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확대반영하고 민원·고객 담당 임원에 KPI 등 인센티브 체계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성과와 연계한 승진·전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연한 영업·근무 형태 및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위는 3월초 기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연내에 개선방안 및 규정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김병관 더민주 비대위원 “창조경제 실체 없다”

〈웹젠 이사회의장〉

“현정부 정책과정 애매모호… 보여주기 행정” 질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웹젠 이사회 의장·사진)은 1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D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어는 좋은데 실체가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창조경제는 ‘사람이 창의성을 발휘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개념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정착화하는 과정에서 애매모호하게 (용어를) 변질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조경제의 핵심 수단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굳이 답변해야 하나. 건물은 예쁘다”라고 꼬집기도 했

다.

김 비대위원은 “기존 센터와 프로그램을 (창조경제로) 이름만 바꿔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다”며 “창조경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잘못됐다. 단순히 빙방을 내주고 공간을 준다고 경제가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나쁜게 표현하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더민주 입당 배경으로 ‘정학·벤처 육성’을 지목했다. 게임업계의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지지정당이 분열되는 것이 짜증나고 화났던 것이 가장 크다”면서도 “정학과 벤처 육성이 평소 하고 싶었던 것인데 근본적으로 보면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이다. 정치로 들어가 해결할 수 있는 기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업체를 대변해 입당한 것처럼 보여지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 그간 인터뷰를 거부했다”면서도 “업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 청소년보호법” 대응 등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IT 인재 추구 영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런 작업을 했는데 (정치 입문이) 사실 인생을 바꾸는 일이다. 제가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설득하는 것이 힘들다. 본인 의지도 있어야 한다”며 말을 이었다. /김민근 기자

한국GM, A/S·마케팅 부문

데일 설리반 신임부사장 임명

한국GM이 1일 영업·애프터서비스(A/S)·마케팅부문 신임 부사장에 데일 설리반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GM 미국 서부지역 쉐보레 책임자였던 설리반 부사장은 2000년 GM에 입사한 뒤 미국 서부지역 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를 담당했으며 중국지역의 쉐보레 브랜드 출시를 이끌기도 했다.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영 및 마케팅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노스웨스턴대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전임자 마크 코모 부사장은 GM차이나 및 SAIC-GM(상하이자동차·GM 합작사)의 영업·A/S·마케팅부문 부사장으로 자리에 옮겼다.

한국GM은 또 신임 마케팅본부 전무로 이일설(이미자)을 최고마케팅관리자(CMO)로 임명했다. 이 전무는 SK케미칼·LG에프알(현 HS애드), 나스미디어, 이엠넷 등을 거쳐 야후코리아에서 근무했다.

/김민근 기자

시민단체,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CEO 고발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한국법인 사장에 이어 독일 본사 대표진까지 검찰에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독일 폭스바겐 마티아스 월러 최고경영자(CEO)와 아우디 루퍼트 스타들러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독일 폭스바겐은 10여년 전부터 배출가스 조작 디젤차량 등 12만 5522대를 불법 제작해 한국에 수출하고 2조원 이상의 혐의난 부당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가 고발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완성된 차량을 수입해 국내의 딜러들에게 재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 본사 대표들을 추가 고발 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사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를 고발한 바 있다.

앞서 환경부는 결합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마 사장과 한국법인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민근 기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 확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강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는 주요 정보자산 유출과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운영하는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이 늘어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규 의무 대상에는 매출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 기업이 포함된다. 다른 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 및 금융업종 전체, 의료 및 금융 이외의 업종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사업자도 의무 대상에 들어간다.

미래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대응능력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민근 기자

SK텔레콤, LTE 데이터 로밍 요금제 출시

SK텔레콤이 전 세계 55개국에서 LTE 속도로 데이터 로밍을 이용할 수 있는 ‘T로밍 LTE 원패스(OnePass)’를 1일 출시했다.

서비스 이용 고객은 하루 1만5000원(부가세 별도)에 LTE 데이터 250MB를 이용할 수 있다.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메신저·웹서핑 등을 즐길 수 있는 200Mbps 이하 속도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해외 현지 수도시각을 기준으로 LTE 데이터 이용 내역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과금 되는 ‘T로밍 LTE 원패스 기본형’과 고객이 LTE 데이터 서비스의 시작 시간과 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간형’ 두 종류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T로밍 LTE 원패스 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이달 LTE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500MB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김민근 기자

구독신청 288-9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령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령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